총리 "새만금개발 가속추진" 공식답변

안호영,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새만금개발 필요" 질문… 이낙연 "매년 예산증액… 다음주 주말 새만금 방문"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내주 새만금 방문 확약 받았다.

안 의원은 21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총리를 상대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 났다"면서 "새만금 SOC사업과 용지매립사업이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성과가 전무한 민간주도 매립사업과 예산투입 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진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SOC를 예정된 일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관광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등의 매립을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방침을 일단 정했다"고 말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이 총리는 예산확보 방안을 다그쳐 묻는 안 의원에게 "해마다 예산을 늘려서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해 향후 새만금 예산확충에 대한 전망도 밝게 했다.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와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되는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내주 말쯤 현지를 가서 잼버리대회 준비상황과 전북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공식 답변해 다음 주 전북과 새만금방문을 예고했다.

/김진성 기자

박재만, '새만금개발 공사 설립' 철저한 준비 필요

정부가 새만금 공공 주도 매립을 약속한 상황에서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 중인 (가칭)새만금개발 공사 설립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지관리기금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군산1)는 21일 정부가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의 매립을 약속한데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의 추진 방법에 대해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추진 방법에 대해 국가주도와 공기업 시행, 공사를 새로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가 직접 운영은 특정한 세입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LH,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은 사실상 투자기피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당초 990만㎡에 이르는 면적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자체 자본금을 고려해 105.4만㎡로 대폭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새만금 공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5,000억 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비롯한 설립자본금의 확보, 투자금 회수, 공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원내대표는 당초 농지위주의 새만금 토지용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매립이 오히려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농업용지 외 타용도 부지를 투자수요 발생시까지 농업목적으로 우선 매립한 후 일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무장애' 통합놀이터 의무설치 해야"

국회서 '통합놀이터 제도적 과제' 토론회 개최

장애아동이 장벽 없이 비장애아동과 놀고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통합놀이터는 턱이나 계단, 평탄하지 않은 바닥 등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놀이공간이다. 지난해 1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문을 연 '꿈틀꿈틀 놀이터'가 대표적이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터 관련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해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외에는 놀이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장애어린이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1990년 서명하고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제23조에서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관리협약에서도 장애아동의 교내활동, 놀이,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 권리 보장을 명시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미 명백하게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론 배려와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 민간 모두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상 의무 편의시설 대상에 어린이놀이터 명시 ▲통합놀이터 설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 ▲통합놀이터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장애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형 변호사도 법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경제법칙에 따라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나 놀이기구가 활성화될 수 없다면, 법률로 의무화하거나 통합놀이터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법 등을 통해 아파트 건설이나 공원 조성 시 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놀이시설을 구비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해주자는 것이다.

그는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통합놀이터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권미혁,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영호 의원은 "통합놀이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통합놀이터 조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장애·비장애를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뉴시스

정동영 후보, 전대 투표 첫날 STX 사고 현장 방문

8월27일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동영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의 STX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정 후보는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첫 날임에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자들과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후보는 "이번 사고 역시 단순한 산재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법 하에서는 하청업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고 제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큰 사고가 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업주나 원청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호주, 캐나나, 영국은 '기업살입법'을 도입해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든 점을 예를 들며 "선진국들 처럼 하면 기업의 안전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사고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미 국회에 '기업살인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 보완해서 새로운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원청 사업주에게 주고 있는 산재보험 환급금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오늘은 국민의당 전당대회 투표가 있는 날이고 이틀 동안 진행되는 K-Voting에 참여해 국민의당 대개혁의 시작을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